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박효주 주거조세팀장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서울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25. 10. 20. (총 9 쪽)

보 도 자 료

주거시민단체, 서울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신통기획, 공급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커, 과잉·과속 정비 사업
중단해야

재건축·재개발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25.5만 반지하, 10만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해야

일시·장소 : 2025년 10월 20일 (월) 09:00, 서울 시청 앞

1.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 2.0’,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건설사, 임대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우선하는 대책으로,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당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규탄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2. 첫번째 발언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팀장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해 한달 만에 철회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고 정부의 규제 지역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운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주택 공급 실적은 미미한 반면, 속도만 강조한 나머지, 주민 갈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팀장은 투기 세력들이 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사거나 소형 지분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주민동의율을 높여 정비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주민간 갈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촉진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공급은 줄고, 고가 아파트 공급만 늘어나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팀장은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지한채, 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과잉·과속의 정비사업 추진을 멈추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지만 문제 진단은 부실하고 해결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도대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하고 장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고, 전세사기와 갭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책이 아닌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겼던 사실과 2022년부터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갭통전세 사태에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여,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응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임대차 관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임대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오 시장이 올해 2월까지도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자랑했지만,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진로·가족계획 등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287세대, 금액으로는 3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3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최근에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며, 서울시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기금까지 만들어서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도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시장은 필요 없다”며 부실 대책과 규제 완화 대책만 늘어놓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습니다.

5.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의 진심이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은마아파트 70%가 재건축을 기대하는 외지인 소유자로, 그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오 시장이 결국 강남 소유주들의 꿈, 투기적 개발 이익 실현의 꿈을 이뤄주는데 진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오 시장이 2031년까지 한강벨트를 포함해 총 31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31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사라지는 주택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42곳에서 신규 공급 주택은 총 38만 호인 반면 멸실 주택은 약 30만호(29.8만호)로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8.3만 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시 중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고, 높은 전월세가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며, 향후 6년간 31만호 공급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서울시에는 24.5만 반지하 가구와 10만 가구에 이르는 쪽방, 고시원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존재하는 만큼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17년여 전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이유로 주민을 내몰고, 철거 폭력으로 6명이 사망했다”며, 당시 전세가 5천만 원이던 동네가 현재는 전세 10억 원이 넘는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투기를 부추기고 강제퇴거와 갈등만 키우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습니다.

- ▣ 붙임1. 발언문
-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발언문

1. 신통기획 2.0의 문제점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연일 계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9월 27일, 정부의 공공 위주의 공급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신통통합기획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불과 한 달 만에 해제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의 주택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신통통합기획’ 사업을 추진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 공급 실적은 미미합니다. 2025년 9월 5일 기준으로 신통기획 공모 선정지 106곳 중 구역지정까지 진행된 곳은 26곳(26%)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속도만 강조한 나머지, 주민 갈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비사업 진입을 조절하는 정비지수제를 없애고 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 계획 물량은 늘어났지만 실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통기획을 통해 대다수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지만, 도심내 저렴주택이 줄어드는 점입니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촉진되며 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공급이 급감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연면적 기준까지 적용해 임대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같은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채, 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H공사를 동원하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맡기는 것은 조합이 추진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여지가 있어 우려됩니다. 또한 구청장에게 정비사업 관련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해치고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합니다. 투기 세력들은 신통기획 재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면서 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사거나 소형 지분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주민동의율을 높여 정비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주민간 갈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입니다.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인해 내몰리는 원주민, 보상받지 못하는 세입자, 도심내 저렴한 주택의 멸실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과잉·과속의 정비사업 추진을 멈추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적 쌓기식 규제 완화, 보여주기식 공급 확대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2.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재건축·재개발 조합, 건설사, 임대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대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하는 오세훈 시장은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건의를 통해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나, 문제의 진단도 부족하고 해결방안도 매우 미흡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늘리기만 하면 공급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고, 현재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사피해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아닌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공급 의욕을 높일 수는 있어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주도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도대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먼저 정책을 발표하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려면 임대사업자 대출 완화와 보증보험 기준 완화 등이 필수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책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키고, 사과했던 것을 벌써 잊었습니까.

서울시는 과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겼던 사실과 **2022**년부터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광통전세 사태에서 임차인 보호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여,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그로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완화에 힘을 쏟기 보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임대차 관리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해외의 임대차 등록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법정갱신 제도나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승인, 분쟁조정 등의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지자체의 임대차 관리행정의 기본인프라가 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3**년간의 반지하주택 매입 호수는 **790**여 호에 불과했고, 청년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을 잊었습니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규제완화만 외치며 또다시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 약속했던 정책이라도 잘 완수하여야 합니다.

3. ‘청년안심주택’의 문제점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

“서울시의 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겠다고 만든 집에서 보증금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믿었던 서울시에 발등이 찍혀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서류를 만들고 진로계획과 가족계획을 접는 등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피해 세입자가 **287**세대, 피해 보증금 액수는 **365**억원에 달합니다. 세입자들은 “도대체 월

잘못해서 이런 곤궁한 지경에 빠져야”했나 “서울시를 믿고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죄밖에 없”다고 하소연 합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최초 보도로는 1년, 가압류가 걸려 심각한 문제가 예정되어 있던 시점으로는 3년이 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최근에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녹장 대응이고, 강통 대책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겠다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서울시는 10년간은 그래도 이사 걱정 없었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그저 시장에 풀리도록 두어서도 안되고, 세입자들의 피해 회복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를 두어서도 안됩니다. 서울시는 정책 실패에 책임을 가지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들은 10월 2일 대책 발표 이후로 서울시로부터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합니다. 살던 집에 애초에 약속대로 10년간 살고싶은 세입자들은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불안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충분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서울시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변명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2월,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와서 법이 미비했고, 시장 상황이 나빴다는 핑계로 서울시의 무책임과 실패를 지우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 뿐 아니라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년안심주택 안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시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 사이의 분쟁 때문에, 입주하기로 약속된 날짜가 일주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 맞춰서 살던 집을 비웠지만, 새 집에 이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이어지는 문제는, 청년 주거문제를 민간개발 활성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아직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이 한참 떨어지는 민간임대주택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 지으라고 지원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짓는 사업에 분양을 하게 해주고, 임대사업자 지원을 해주겠다고 기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사업자만 걱정인가 봅니다. 세입자들이 걱정 없이 살 수는 대책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세입자들에게 도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시장은 필요 없습니다. 부실대책 내어놓고 규제완화를 위한 핑계를 늘어놓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합니다.

4.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중단 촉구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얼마 전 은마아파트를 찾은 오 시장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는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데 진심이다", "여러분들의 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은마재건축 조합원들 앞에서 한 "여러분들의 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의 진심이다"라는 말에서, 개발규제 완화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진심이 보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년 은마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석에 따르면 소유주 가운데 실거주 비율은 31.5%에 불과했습니다. 주택의 10가구 가운데 7가구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소유한 투기적 외지 소유자들입니다. 소유주들의 주소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거래도 증여나 상속, 강남 3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리그였습니다.

오 시장이 "여러분들의 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은마아파트 소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말은, 결국 강남 소유주들의 꿈, 투기적 개발이익 실현이라는 그 꿈을 이뤄주는데 서울시가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주택 총 31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며 속도전을 발표했습니다. 6년간 31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여기엔 감춰진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1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사라지냐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의 멸실을 동반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442개 구역입니다. 442개 구역의 공급과 멸실을 분석해 보니 공급되는 주택은 총 38만 호고, 기존 주택의 멸실은 약 30만호(29.8만호)입니다. 38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제 늘어나는 순증은 8.3만 호에 불과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442개 구역 중 재개발이 270여 구역인데, 재개발지역에는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즉, 등기상 주택은 1채로 표시되지만, 그 1호에 보통 3~5,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 30만 호가 사라진다는 말에는 최소한 35만 세대 이상의 집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그 경우 주택공급의 순증효과는 유명무실합니다. 오 시장의 31년까지 31만 호 공급 과정에서, 약 30만 세대의 도시 서민들의 저렴한 집이 사라지고, 30만 가구의 서울시민들의 이주해야 하며, 이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세입자가 비율이 더 높은 도시입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뿐아니라 높은 전월세가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의 고통이 큼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의 6년간 31만호 착공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전월세 가격도 급격히 상승시킬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개발로 인한 대규모 이주수요는, 당장 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문제 뿐아니라 그 인근을 비롯한 서울시 전체의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입니다.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인, 24.5만 가구의 서울시 반지하 거주가구와 10만 가구에 이르는 쪽방, 고시원등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집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멈춰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수십억에 사고 팔리는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공급이 서울 세입자들과 주거취약계층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3개월 후 1월 20일이면. 용산참사 17주기가 됩니다. 오 시장이 17년여 전에도 주창한 속도전의 빠른 개발을 위해선, 빠르게 주민들을 내몰아야 했고, 그 개발 속도전의 철거 폭력에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세가 5천만 원 미만이던 그 동네는, 전세만 10억이 넘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변모했습니다.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속도전을 통한 오 시장의 주택공급 본질이 바로 19년 전 용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투기만 부추기고 강제퇴거와 갈등만 키우며, 서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 불임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울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 진행 순서
 -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1 : 신통기획 2.0의 문제점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2 :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발언3 : ‘청년안심주택’의 문제점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
 - 발언4 : 서울시 공공부지 민간매각 중단 촉구 / 김황경산 혁신파크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상황실 활동가
 - 발언5 :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중단 촉구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02-723-5052)